

보수적 개혁마저 물거품이 되면 21세기 역사는?

정태헌

역사에는 결코 공짜나 비약이 없다. 앞 시대의 실타래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그 업보는 두고두고 뒷시대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유럽의 침략 물결이 동아시아로 넘실대기 시작하던 19세기를 한반도는 어떻게 맞았나? 유감스럽게도 이를 맞은 주체는 대내외적으로 패쇄적이고 부패한 세도정치였다. 그런데 18세기 말 정조 때에는 역사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었다. 역사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지만, 하나의 상징으로서 정약용을 거론한다면 그가 세도정치 세력에 의해 귀양가서 방대한 저술을 남기는 것보다, 그를 신임하던 정조라는 권력과 더불어 개혁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닦아놓는 것이 역사의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당시 정조를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이 추구한 방향을 한마디로 묶으면 보수적 개혁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수구 세력은 그조차 수용하지 못했고, 결국 정조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후 성장해 가던 개혁세력도 숙청당했다. 세도정치와 더불어 맞게 된 19세기 이후의 역사가 어떠한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한반도는 이제 격동의 21세기를 어떻게 열어 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있다. '노무현 정부' 라는 단어가 불과 5~6개월 전인 작년 말까지만 해도 무척 생경하게 들렸던 기억이 아련해질 만큼 근자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하루

가 여삼추다. '노무현 정부' 라는 단어가 귀에 익숙해지자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해 많은 기대를 안고 있던 그가 그를 지지한 세력에게서 멀어지는 대신, 거꾸로 그를 거부했던 수구세력에 끌려가고 있으며 진보세력은 분열되고 있다는 평가가 벌써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출범한 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새 정부에 대한 이런 평가가 과연 적합한가 하는 회의감도 있지만, 그런 평가가 일정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 한구석이 실로 착잡하다.

지난 세기가 끝날 무렵, 정확하게 분단 49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경험을 한 우리 사회는 이제 과연 보수적 개혁이란 무엇을 지향하는 가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제기할 때를 맞이한 것 같다. 노무현 정부는 반세기가 넘도록 수구 세력에 의해 좌우되어 왔던 우리 사회에 대한 변화 욕구가 선거를 통해, 그것도 아주 간발의 차이로 출범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워낙 정치 지형의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지라 노 정부의 출범을 두고 무슨 혁명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어떤 과도한 기대감에 부푼 지지층도 눈에 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정부가 의도하는 변화의 시도는 물론 정부 자체에 대한 비생산적 판지결기가 언론을 비롯한 각 분야에 만연해 있다.

노정권을 통해 우리 역사가 기대하는 것은 보수적 개혁을 가시화함으로써 이후 발전의 한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다. 그 이상은 아니고 그 이상을 넘을 수도 없다. 보수적 개혁이란 지금의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안정되게, 그리고 보다 생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부문의 일 처리가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명분에 그쳤던 규칙이 현실적으로 관철되어 일반에게 체득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를 탈바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외과적 처방에 의한 치료라고 비유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를 자임하는 집단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보수적 개혁이란 결국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추구하는

바를 지금보다 훨씬 튼튼하게 해주는 결과를 낳는 실험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를 위한 처방의 수준과 국민이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즉 변화 속도에 따라 이제까지 지배 블록에 속했던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또 이제까지 누리던 이익에 비해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거시적인 역사 진행의 안목에서 볼 때 보수와 수구가 뒤섞여 있던 흙탕 속에서 수구를 가려내는 것에 불과하다.

흔히 지적하듯이, 우리 사회의 맹점은 부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 대한 대중적 존경심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변칙과 연줄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근현대사가 거쳐 온 과정에서 겪은 경험의 소산이지, 특별히 한국 국민이 시기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열린 수준에서 공정한 룰을 통해 부나 권력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보수적 개혁의 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남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 보수를 자임하면서 이를 인정받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보수는 수구와 결별해야 한다. 수구와 뒤섞이면 보수는 결코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 역사는 그런 점에서 또 다시 중요한 분기점에 선 것이다. 아직까지는 강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지만 미래를 낙관할 수만 있는 상황도 아니다. 시대적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분출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질 낮은 판지결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통령의 면전에서 검찰과 언론을 누르지 말라고 거침없이 말하면서 스스로를 탄압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어이없는 광경도 종종 목도된다. 전두환이 떼어먹은 벌금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현 정부나 대통령 주변인물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세우고 사자후를 토하기도 한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인간적인, 그러나 지지자로 하여금 등 돌리게 만드는 불평을 원색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노 정부는 출범 이전에 세운 '원칙'의 잣대를 충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원칙'의 잣대가 국민 가슴 깊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보수적 개혁의 시발점이다.

무릇 선거에 의한 변화, 보수적 개혁이란 잡다한 세력을 안고 가면서 '정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힘든 것이고, 선거에 의한 사회 변화란 본래 그런 것이다. 민주화의 대장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구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리더십을 열린 보수로 대체하려는 첫걸음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 식민지적 근대의 질곡을 안은 채 전개된 우리 근현대사의 썩었던 부분이 드러나면서 억지 논리와 반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정도의 진통도 없이 어찌 새 살이 솟아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보수여! 지금은 혁명의 시대가 아니다. 너무 조금증을 갖지 말라.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파국을 막으려면 수구와 결별하고 열린 보수로의 변화에 적응하라. 그리고 건강한 보수란 이런 것이라는 가르침을 심어줘라. 20세기 이전의 우리 역사가 비생산적인 판지결기로 일관된 끝에 결국 나라를 결판내고 말았던 역사의 교훈을 차분하게 되새길 때가 아닐 수 없다.

어렵게 『기억과 전망』이 벌써 세 번째의 얼굴을 내밀었다. 무엇을 왜 기억하고 과연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농축해서 쉽게 담고자 애쓰고 있지만, 독자들에게 얼마만큼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건강한 문제의식을 전파하는 잡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역사에 공짜나 비약이 없다는, 너무나 냉엄하고도 무서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정태현 taehern@hotmail.com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의 한국근현대사 관련 논문 다수.

